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100일 메시지' 관심 집중

### 민생 최우선 기조 속, 지방서 현장 최고위 등 열며 시민목소리 경청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수사 압박에 '정면 돌파' 의지...SNS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 100일 동안,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 극복을 위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려됐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치적 입지가 편치 않은 형국이다. 사법리스크 극복 없이는 정치적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유능한 대안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줄곧 민생 최우선 기조를 강조해 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강조하며 지방에 내려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도부 회의에 특정 이슈와 관련한 시민을 초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 대표의 민생 최우선 행보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야당이라는 점에서 민생의 갈증을 푸는데 한계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갈수록 이 대표를 옥죄어 오는 '사법 리스크'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비롯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비,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성

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거리두기를 해왔다. 자칫, 선불리 대응할 경우, 이슈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다 민생 행보의 의미가 퇴색할 것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측근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잇달아 구속되며 이 대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당장 당내의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

조용천 의원은 유감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고,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점차 좁혀 들어올 경우, 당내 분란이 확산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은 절대 해당 의혹들에 연루된 일이 없는 만큼 검찰이 소환하면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최근 구속과 관련,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하는 등 일관된 기조로 검찰에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발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서 강력 대응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민생 행보를 분리해 대응하겠다

는 선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법리스크와 관련, 친명 일색의 민주당 지도부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정면 돌파하면서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일 새벽 월드컵 16강전이 펼쳐지고 신년 기자회견 등도 있는 만큼 5일 이 대표는 그동안의 대응 연장선상에 있는 메시지를 SNS 등을 통해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고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민심과 함께 시련을 극복해가는 불굴의 정치인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어떠한 메시지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찾아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 구역 출입금지

#### 서동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은 4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방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



는 사례가 한해 7000여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 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 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산단노동자휴게소 설치 지원 증액 상임위 통과

#### 홍기월 시의원 "사업 지속위해 불가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도 '산단 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비'가 증액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본 예산 심의에서 산단 노동자 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비를 6000만원 증액해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광주시의회 홍기월(민주·동구1)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단독 조례로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을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건축 재정을 이유로 지난해에



비해 1000만원 감액된 9000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신설하고, 냉·난방 및 환기 시설 등 고정식 시설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재원

비율이 시비 90%와 자부담 10%로, 업체당 최대 1250만원이 지원돼 노동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단노동자휴게소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은 오는 8월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

###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수사 뒷선 향하나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檢,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연관성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다음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법원에서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받아들여 수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검찰은 가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

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숙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

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검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